



광주시민들이 8일 광주송정역 대합실에서 한덕수(왼쪽)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국민 공동 담화를 하고 있는 장면을 시청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여의도 국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한덕수 총리 공동 담화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우 “총리·여당 권한행사는 위헌... 여야 회담 제안”

원석

“운 직무 즉각 중단...탄핵절차 매듭을
“위헌 행위 멈추고 헌법·법률 따라야”
한덕수 “與와 협의, 민생·국정 운영”
한동훈 “질서있는 퇴진...혼란 최소화”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동 국정운영 구상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8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고 현재의 불안정한 국가적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여야가 만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매듭짓자는 제안이다. 우 의장은 “헌법에 있는 탄핵 절차를 마무리하고 현재 불안정한 국가적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여야 회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책임자를 분명하게 하지 않는 이런 불안정성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겠나. 아마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의장은 국민의 판단이 존중될 수 있

도록 국회를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주체인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한 총리와 한 대표가 발표한 공동 국정운영 구상에 대해선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공동 담화 발표 등을 통해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할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당장 헌법에 없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국정안정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 같은 뜻을 한 총리에게도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가 공동 담화문 발표 직후 우 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절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한 총리와 한 대표의 회담 후 한

총리가 제게 전화했다”며 “(한 총리가) 오늘 담화 중 있었던 그것(내용)과 같이 제게 협력을 당부한다며 국회와 앞으로 성실히 상의해가며 일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위임한 바 없는데 여당 대표와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옳지 않으며 인정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고 했다.

한 총리와 한 대표는 이날 오전 발표한 대국민 공동담화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정 혼란을 조기 수습하겠다고 하며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행할 것”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덕수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한동훈 대표와 발표한 공동 대국민 담화문에서 국회를 향해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협조를 구하겠다”며 “비상시에도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그 부수법안의 통과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안이 조속히 확정돼 각 부처가 제때 집행을 준비해야만 어려운 시기 민생경제를 적기에 회복시킬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감액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추진 등이 이어지며 내년도 예산 협의는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한 총리는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 한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라면서 “국가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매순간 최선을 다해 국민을 섬기겠다”고 밝혔다.

또 한동훈 대표는 “질서 있는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해 국민과 국제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민생과 국력을 회복시키겠다”며 “당내에 논의를 거쳐서 그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

므로 질서있는 조기 퇴진 과정에서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민적 불안과 국가적 피해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다”며 “국민들께서 정부에 느낀 실망감과 불신은 대단히 크다.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게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준엄한 국민의 평가와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질서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들께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 차질 없이 행할 것”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국제 사회에서 우려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이재명 “내년 예산안 추가 삭감... 내일 처리 바람직”

“한 총리 계엄 동의 추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내년도 예산을 추가로 삭감해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협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장의 의견에 따라 (예산안 처리가) 약간 지연되고 있는데, 10일까지 처리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조금 추가 삭감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예결위에서 필요한 것들을 (삭감) 했지만 지금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서 추가 삭감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677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에서 4조1000억원을 삭감한 수정 예산안을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는데, 삭감 규모를 더 확대하겠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이날 중 예산안 처리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계엄사태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선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이 중요한 국면에서 국정을 논의 또는 담당하게 하는 게 타당할지 심각하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고민해야 될 상태로 보여진다”고 답했다.

그는 “한 총리는 국무회의의 주요 구성원이기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국방장관의 계엄 건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동의)했을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며 “총리가 이번 계엄에 동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야권 일각서 한동훈 대표에 대한 특검 주장이 나오는데 대해선 “당내 갑론을박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아직 최종 결정을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선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상설특검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민주 “윤 대통령 즉각 체포... 군 통수권 박탈해야”

“김용현·여인형 등 즉각 구속 수사”

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체포해 수사하고 군 통수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2:3 계엄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내란특검’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군 검찰과 협력해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는 “당권 장악과 자기 대선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축소 수사, 사면을 약속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자 전원을 반드시 즉각 수사해야 한다”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명백하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예측 불허의 후속 사태를 막기 위해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군 통수권 박탈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비롯해 1차 계엄에 동원된 핵심 지휘관의 즉각적인 구속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직무정지 이전에라도 연금하고 일체의 자료 접근을 금지해야 한다”며 “김건희 여사 또한 마찬가지로. 대통령실 내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직속

세력 모두 신병확보와 자료접근 금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하고 특검으로 가야 한다”며 “국회는 신속하게 내란특검을 통과시키고 군 검찰과 협력해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검찰을 향해선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미 탄핵 대상에 올라있음을 잊지 않길 바란다”며 “서울고검장에 대해서도 동기와 배후를 의심할 정황을 이미 확보하고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그는 “곧 모든 수사 경과를 국수본과 특검에 이관하게 될 것”이라며 “내란 사태에 가담한 경찰 지휘부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정국 수습 방안을 논의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도 “윤 대통령과 두 사람이 합의한다고 일본, 일 초의 위헌 통치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김 최고위원은 “한 총리는 국정 운영 중심이 될 수 없다. 헌법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장이라도 전시상황이 생기면 대통령 외에는 누구도 군 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책임총리제 운운은 현행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라를 완벽

한 비정상적으로 끌고가는 위헌적, 무정부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의 공동 국정운영 구상에 “내란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여당 대표와 총리가 다시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중”이라며 “우리 국민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지 여당을 대통령으로 뽑은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야말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또 다른 쿠데타”라며 “어떻게 이런 국민 주권을 무시한 발칙한 상상을 할 수 있는지 참으로 놀라기가 그지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면직을 재기한 것을 두고 “이 일에서 보는 것처럼 대통령의 직무는 전혀 정지된 게 아니고 여전히 행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왜 대통령이 즉시 탄핵돼야 하는지 스스로 입증했다”며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 주범, 군사반란 주범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거나 즉각 탄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